



BRIEF

납세자의 심리적 요인이 납세순응행위에 미치는 영향

박명호 연구위원(044-414-225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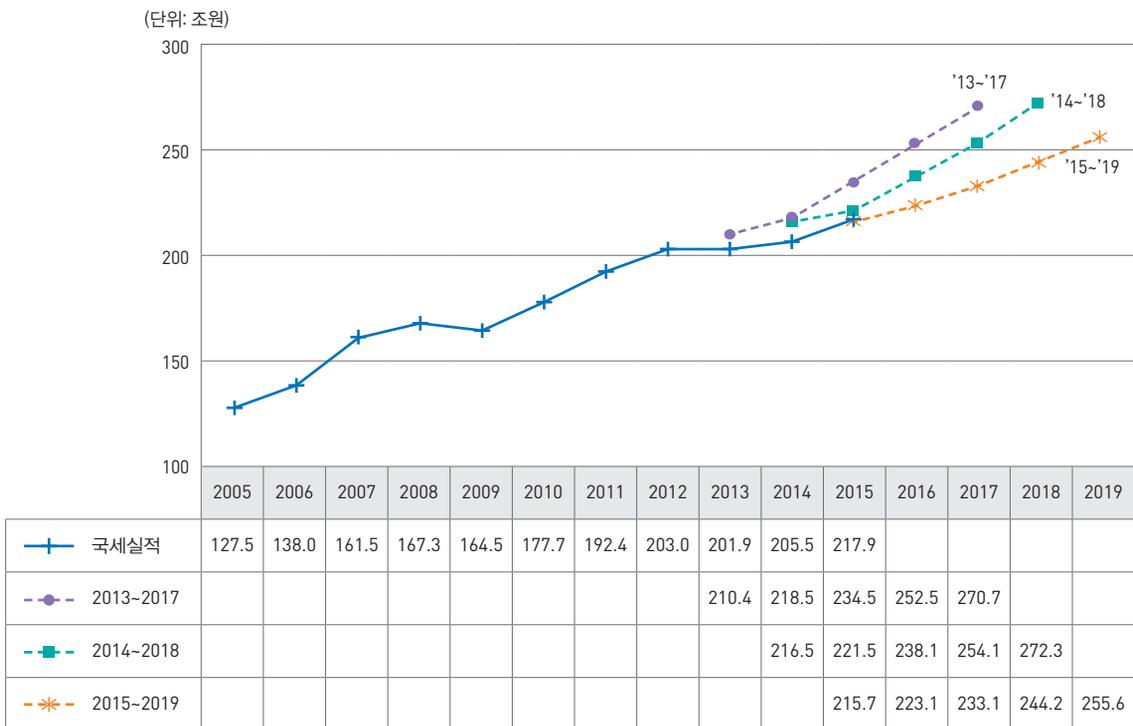
I. 배경 및 문제점	02
II. 조사 및 분석결과	04
III. 정책제언	21
IV. 기대효과	22



I 배경 및 문제점

- (재정수입 여건의 변화) 지난 4년간 국세수입 실적이 확정예산보다 낮음에 따라 2015년에는 추경예산 편성을 통해 국세수입 예산을 하향 조정
 - 정부는 국세수입 부진이 구조적인 변화로 인식하고 아래의 [그림 1]과 같이 5년단위 국가재정 운용계획에서 국세수입 전망을 대폭 하향 조정

[그림 1] 연도별 국가재정운용계획상 국세수입 전망 추이



- (재정지출 여건의 변화) 복지수요의 증가로 의무지출이 GDP보다 빠르게 증가하는 가운데 중장기적으로도 인구고령화와 복지제도의 성숙 등으로 재정지출은 더욱 빠르게 증가할 전망
 - 2015~2019년 국가재정운용계획에 따르면 의무지출은 연평균 6.1%씩 증가하고, 특히 복지분야의 법정지출은 연평균 6.7%씩 증가하여 GDP보다 빠르게 증가할 것으로 예측

- (재정총량 측면) 우리나라의 재정상태는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지속적으로 악화되어 국가 채무비율은 2016년에 40%를 돌파할 것으로 예상
 - 중기계획 기간 내내 재정수입보다 재정지출이 많음에 따라 관리재정수지가 지속적으로 적자를 기록할 것으로 전망

- (증세정책의 제한) 이처럼 국가재정 여건이 악화됨에 따라 세입 확충이 절실하지만 경기 회복이 더디게 진행되어 납세자인 기업과 가계의 경제 상황이 개선되지 않음에 따라 새로운 세목의 신설이나 세율 확대 등의 증세정책을 펴기 힘든 상황

- (세입 확충의 현실적인 대안) 어려운 재정여건과 증세정책의 제한에 처한 정부가 취할 수 있는 현실적인 대안은 현행 세법 아래에서 납세자로 하여금 자발적으로 성실하게 납세 의무를 이행하도록 독려하는 방안
 -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재정악화를 경험한 다수의 선진국도 자발적 납세순응을 제고하는 정책을 추진하는 것이 일반적인 현상

- 납세자의 자발적인 납세순응행위를 결정하는 주요 요인으로 최근 납세자의 심리적 요인들이 주목을 받는 상황

- 이에 본 연구는 납세자의 심리적 요인이 납세순응행위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이해를 도모하고자 추진
 - 본 연구에서는 우리나라 국민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고, 이를 통해 획득한 자료를 분석하여 도출한 결과를 논의

II 조사 및 분석결과

가. 설문조사 개요

● ● 조사대상 및 기간

- 대상자: 전국 16개 시도 내에 거주하는 만 25~64세 성인 남녀
- 조사기간: 2015년 11월 23일 ~ 12월 16일

● ● 조사내용

- 설문조사 내용은 크게 인구통계학적 질문들과 납세자들의 납세순응과 관련된 질문들로 구성
 - 납세순응 관련 질문들은 납세순응행위, 성실납세의향 등 7가지 유형의 납세자 인식을 조사

[표 1] 설문조사 내용

구분	내 용
인구통계 특성 질문	- 거주지역, 성별, 연령, 고용형태, 교육수준, 배우자 유무, 연평균 소득수준, 1년간 복권 구입 유무, 이념적 성향 등
국민들의 납세순응 관련 질문	- 납세순응행위 - 성실납세의향 - 사회규범에 대한 인식 - 조세제도에 대한 이해 - 조세제도의 형평성에 대한 인식 - 국세행정에 관한 인식

● ● 응답자의 인구통계학적 특징

(단위: 명,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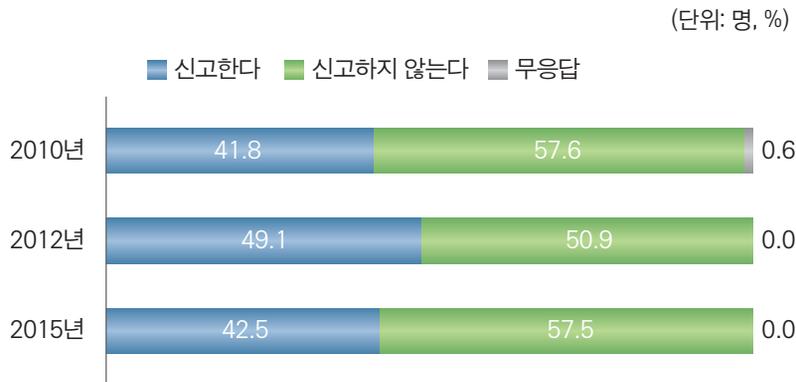
구분		응답자 수	비중	구분	응답자 수	비중	
전체		2,299	100.0	1천만원 미만	283	12.3	
성별	남성	1,262	54.9	연평균 소득 수준	1~5천만원 미만	1,465	63.7
	여성	1,037	45.1		5~9천만원 미만	468	20.4
연령	20대(25~29세)	292	12.7		9천만원 이상	83	3.6
	30대(30~39세)	613	26.7		배우자 유무	있음	1,522
	40대(40~49세)	683	29.7	없음		777	33.8
	50대(50~59세)	544	23.7	거주 지역	수도권	1,123	48.8
	60대(60~64세)	167	7.3		기타 광역시	695	30.2
고용 형태	임금근로자	1,444	62.8		그 외 지역	481	20.9
	사업주/자영업자	472	20.5	교육 수준	중졸이하	44	1.9
	전업주부	154	6.7		고졸	490	21.3
	미취업자	114	5.0		대졸(전문대졸)	1,538	66.9
	무급가족종사자	115	5.0		대학원 이상	227	9.9

나. 납세순응행위 및 심리적 요인 관련 변수들의 기술통계량

1) 납세순응행위 지표

- ● (가상 납세순응행위 1) 증빙자료가 없어 국세청의 적발 가능성이 없음을 알고 있는 현금 매출액 1천만원에 대한 신고 여부를 묻는 응답 결과
 - 응답자 10명 중 4명 정도인 42.5%는 신고한다고 응답
 - 지난 2010년에는 신고한다는 의견이 41.8%였으며, 2012년에는 49.1%로 다소 증가했으나 2015년 들어 조사한 결과는 다시 42.5%로 하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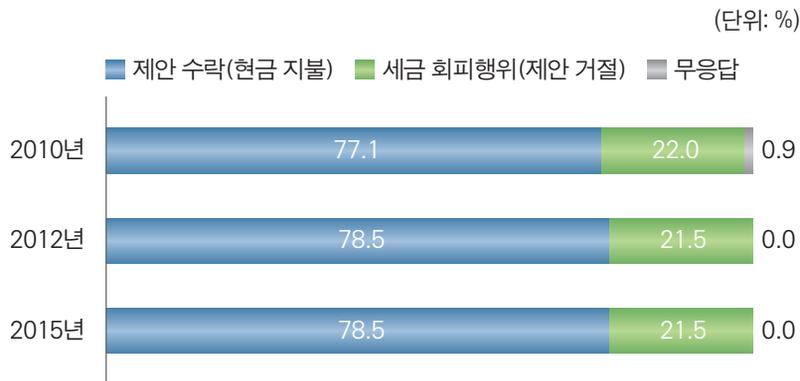
[그림 2] 가상 납세순응행위 I



- ● (가상 납세순응행위 2) 물건을 구매할 때 현금으로 결제한다면 10% 할인혜택을 준다는 제안에 대한 응답 결과

- 응답자는 10명 중 2명에 해당하는 21.5%만이 세금회피를 위한 행위이므로 응하지 않는다고 답했으며, 나머지 78.5%는 제안을 받아들여 현금으로 지불한다고 응답

[그림 3] 가상 납세순응행위 II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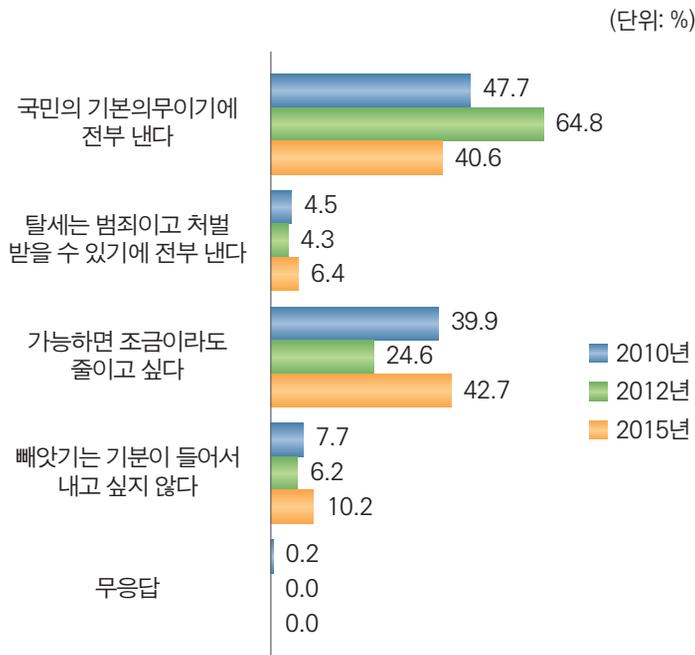


2) 성실납세의향 지표

- ● (세금납부에 대한 의견) 각종 세금을 납부할 때 어떤 생각이 드는가에 대한 응답 결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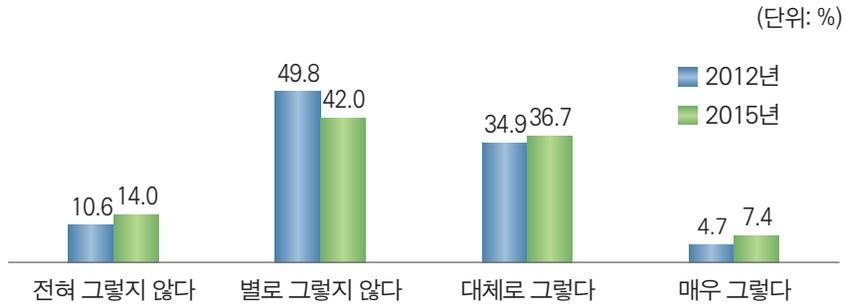
- “국민의 기본무이기에 전부 낸다”는 적극적 성실납세의향을, “탈세는 범죄이고 처벌받을 수 있기에 전부 낸다”는 소극적 성실납세의향을, “가능하면 조금이라도 줄이고 싶다”와 “빼앗기는 기분이 들어서 내고 싶지 않다”는 성실납세의향이 없음을 보여주는 것으로 해석
- 성실납세의향이 없는 응답자의 비율은 52.9%, 적극적 성실납세의향을 보인 응답자는 40.6%, 소극적 성실납세의향을 보인 응답자는 6.4%로 조사
 - 성실납세의향이 없는 것으로 나타난 응답자 중 “가능하면 조금이라도 줄이고 싶다”에 대한 응답 비율이 42.7%로 높고, 납세에 대한 반감을 보여주는 “빼앗기는 기분이 들어서 내고 싶지 않다”에 대한 응답 비율은 10.2% 정도

[그림 4] 세금납부에 대한 의견



- (세금납부회피 위험) 적발될 가능성이 전혀 없다면 세금납부를 회피할 의향이 있는가에 대한 응답 결과
 - 조세회피의향(대체로 그렇다 36.7%, 매우 그렇다 7.4%)을 보인 응답자는 전체의 44.0%, 조세회피의향이 낮은(전혀 그렇지 않다 14%, 별로 그렇지 않다 42%) 응답자는 56%로 응답자의 절반 이상은 낮은 조세회피의향을 지닌 것으로 조사

[그림 5] 적발 가능성이 없을 시, 세금을 회피할 의향 여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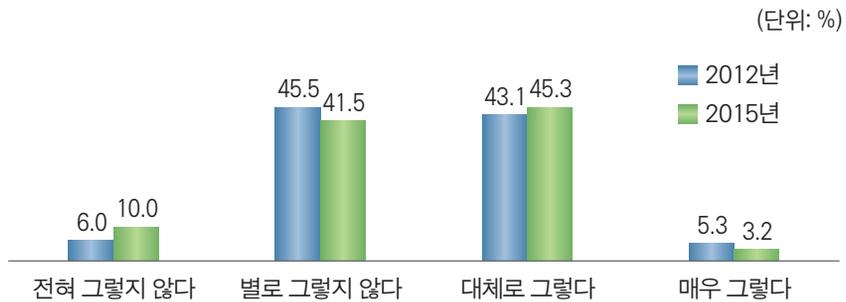


3) 사회적 규범 지표

● (기술적 사회규범 1) 대부분의 국민들이 세금을 정직하게 납부하고 있는가에 대한 응답 결과

- 국민들의 성실납세 여부에 대한 인식은 그렇지 않다(전혀 그렇지 않다 10%, 그렇지 않다 41.5%)는 부정적 답변이 51.5%로 그렇다(대체로 그렇다 45.3%, 매우 그렇다 3.2%)는 긍정적 답변보다 높게 조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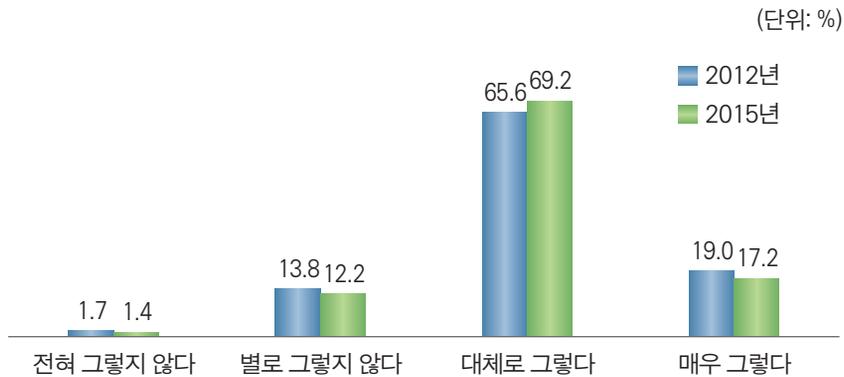
[그림 6] 국민들의 성실납세에 대한 인식



● (기술적 사회규범 2) 본인의 가족, 친구, 직장동료 등 주변 지인이 세금을 정직하게 납부하고 있는가에 대한 응답 결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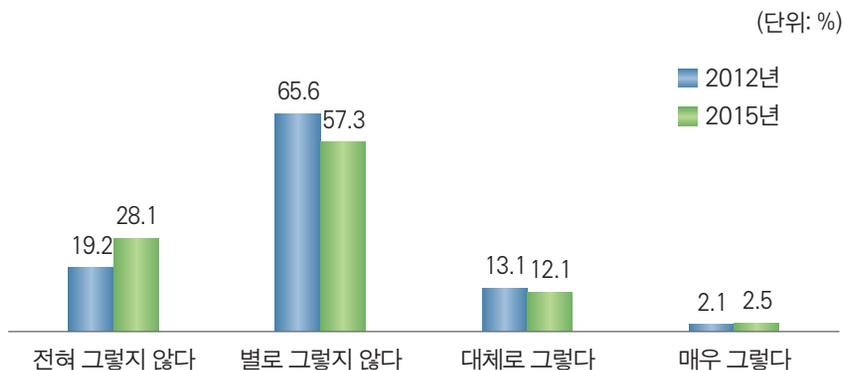
- 지인의 성실납세에 대한 인식은 “그렇다”는 긍정적 답변이 86.4%로 “그렇지 않다”는 부정적 답변보다 훨씬 높게 조사

[그림 7] 지인의 성실납세에 대한 인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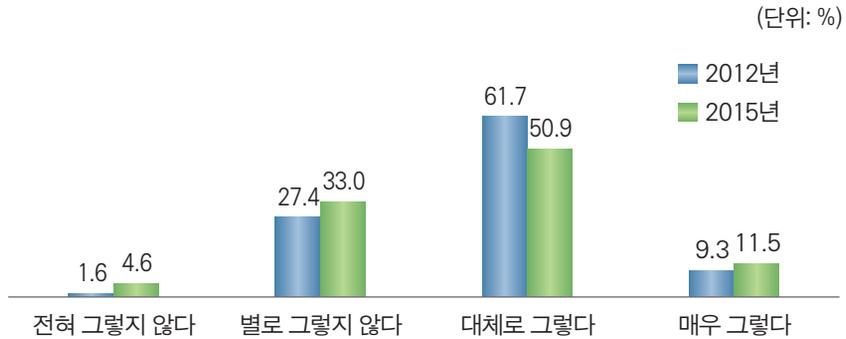
- (명령적 사회규범 1) 세금을 정직하지 않게 납부한 것에 대해 충분한 사회적 지탄이나 처벌이 행해지고 있다고 생각하는가에 대한 응답 결과
 - “그렇다”는 긍정적 답변이 14.6%로 “그렇지 않다”는 부정적 답변보다 훨씬 낮게 나타나, 불성실한 납세행위에 대해 사회적 지탄이나 처벌 수위를 조절할 필요성이 있음을 시사

[그림 8] 부정직한 세금 납부에 대한 사회적 지탄이나 처벌 정도



- (명령적 사회규범 2) 본인이 세금을 정직하게 납부하지 않았다고 친구에게 말할 때 그 이야기를 들은 친구가 본인에 대해 부정적인 인식을 지닐 것인가에 대한 응답 결과
 - 조사결과 “그렇다”는 긍정적 답변이 62.4%로 “그렇지 않다”는 부정적 답변보다 높게 나타나, 절반 이상이 불성실한 납세행위를 하면 지인으로부터 부정적인 평가를 받을 것으로 인식

[그림 9] 부정직하게 세금을 납부한다면 친구의 부정적인 인식 정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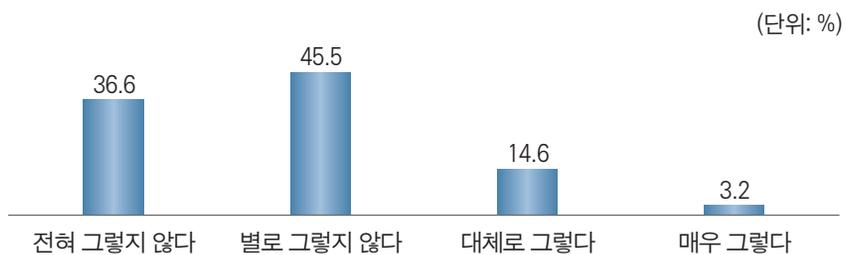


4) 조세형평도 지표

● ● (수직적 형평성) 경제적 능력이 높은 사람들이 더 많은 세금을 부담하고 있는가에 대한 응답 결과

- 전체적으로 그렇다(대체로 그렇다 14.6%, 매우 그렇다 3.2%)를 선택해 수직적 형평성이 유지된다고 응답한 비율이 17.8%로 나타나 82.1%의 응답자는 경제적 능력이 높은 사람이 더 많은 세금을 부담하지 않은 것으로 인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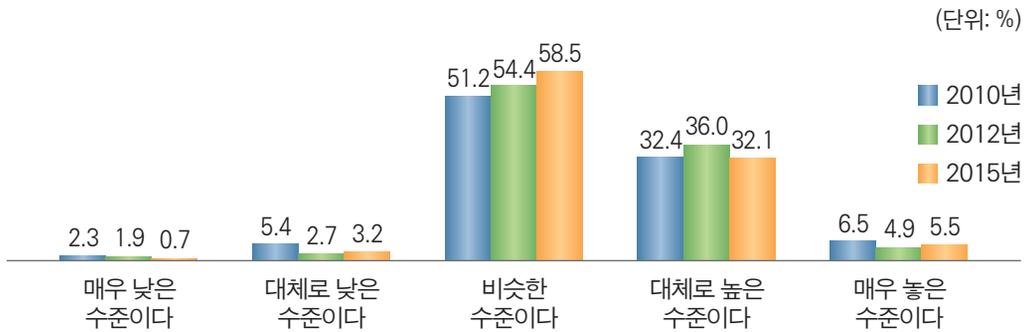
[그림 10] 수직적 형평성



● ● (수평적 형평성) 본인의 경제적 능력과 비슷한 사람들과 비교해 본인의 세금부담 수준이 어떤가에 대한 응답 결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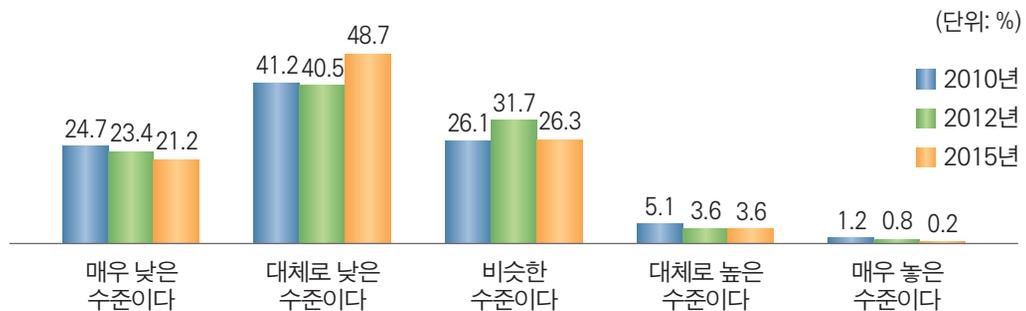
- 비슷한 수준으로 인식한 응답자가 58.5%로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해 수직적 형평성과 비교할 때 수평적 형평성에 더 긍정적으로 인식하는 경향

[그림 11] 수평적 형평성



- (교환의 형평성) 본인이 납부한 세금과 비교하여 정부로부터 받은 혜택수준이 어떤가에 대한 응답 결과
 - 대체로 낮은 수준을 선택한 비율이 48.7%로 가장 높고, 적절한 수준(26.3%), 매우 낮은 수준(21.2%), 대체로 높은 수준(3.6%), 매우 높은 수준(0.2%) 순으로 선택하였고, 절반 이상의 응답자가 납부한 세금과 비교해 정부로부터 받은 혜택수준이 낮다고 인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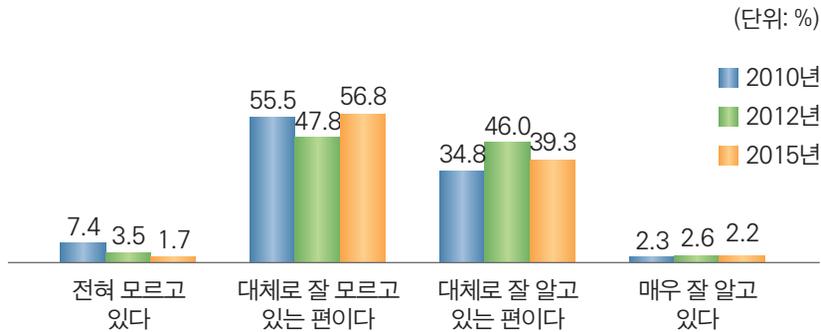
[그림 12] 교환의 형평성



5) 조세이해도 지표

- (조세에 대한 주관적 이해도) 각종 세금에 대해 얼마나 알고 있는가에 대한 응답
 - 세금에 대해 모른다는 부정적 답변(대체로 잘 모르고 있는 편이다 56.8%, 전혀 모르고 있다 1.7%)이 58.5%로 나타나 세금에 대해 잘 안다는 긍정적 답변(대체로 잘 알고 있는 편이다 39.3%, 매우 잘 알고 있다 2.2%)보다 높은 수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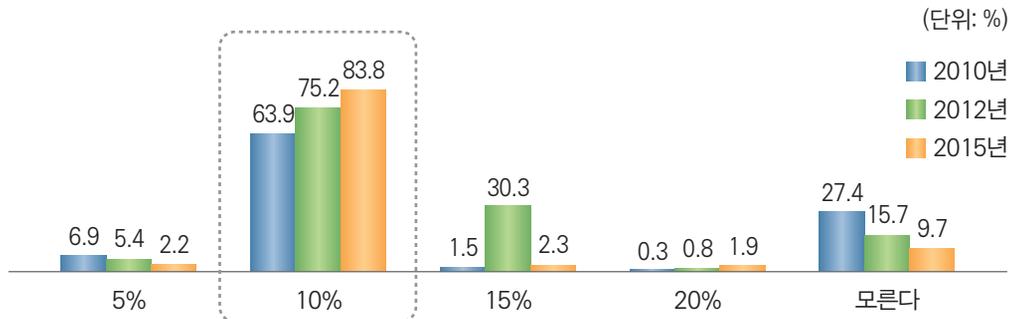
[그림 13] 세금 인지 정도



● ● (조세에 대한 객관적 이해도 1) 우리나라의 부가가치세율에 대한 응답 결과

- 전체 응답자의 83.8%가 부가가치세율이 10%라고 답해 응답자 대부분이 부가가치세율을 올바르게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
 - “모른다”를 선택한 응답자가 9.7%, “15%”를 선택한 응답자가 2.3%, “5%”를 선택한 응답자가 2.2%, “20%”를 선택한 응답자가 1.9%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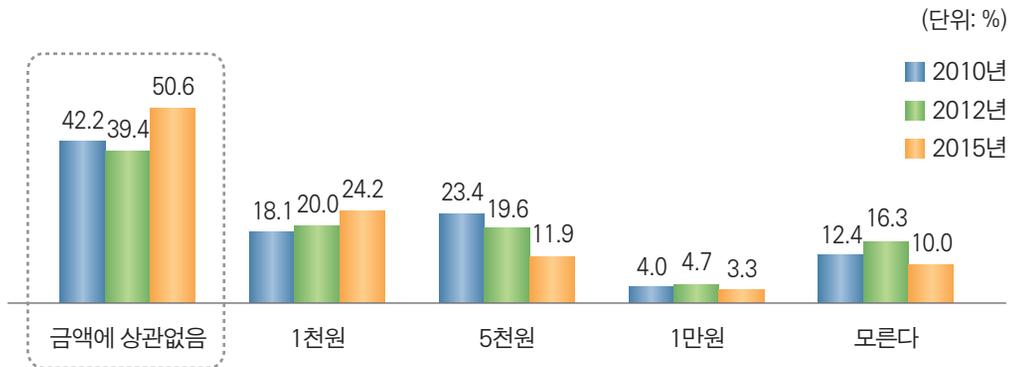
[그림 14] 부가가치세율 인지 여부



● ● (조세에 대한 객관적 이해도 2) 현금영수증 최저발급금액에 대한 응답 결과

- 전체의 50.6%가 금액에 상관없이 모든 거래 금액에 현금영수증을 발급해야 한다고 응답해 절반 정도만 현금영수증에 대해 올바르게 인식한 것으로 조사
 - “1천원”을 선택한 응답자가 24.2%, “5천원”을 선택한 응답자가 11.9%, “모른다”를 선택한 응답자가 10%, “1만원”을 선택한 응답자가 3.3%

[그림 15] 현금영수증 인지 여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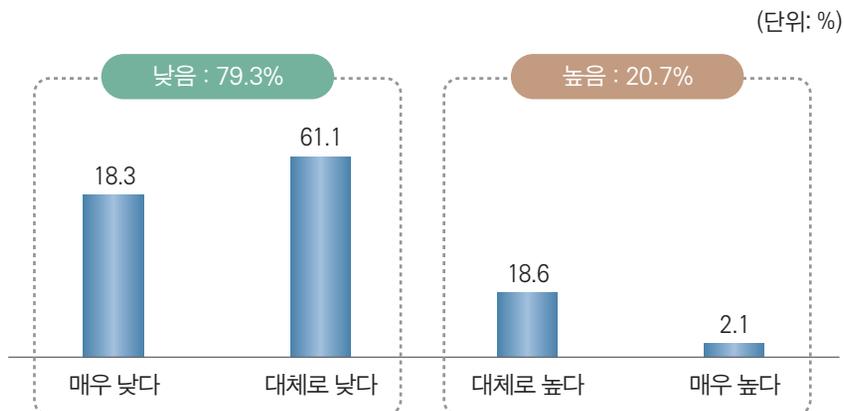
6) 국세행정에 관한 인식 지표

●● (정기적인 탈세의 발각 가능성에 대한 인식) 소득세를 정기적으로 탈세했을 때 과세관청에 발각될 가능성에 대한 응답 결과

- 소득세를 정기적으로 탈세하는 사람들이 과세관청에 발각될 가능성을 묻는 질문에 79.3%가 대체로 낮거나 매우 낮다고 응답해 많은 납세자들이 과세관청의 세무조사 등을 통한 탈세 적발 수위를 높지 않게 생각하는 것으로 조사

- 탈세자의 발각 가능성이 대체로 높다고 응답한 비율은 18.6%였으며, 매우 높다는 응답은 2.1%에 불과

[그림 16] 소득세 정기 탈세자의 발각 가능성



● ● (탈세 적발시 벌금 등 처벌 수준) 탈세가 적발되었을 때 벌금 등의 처벌이 어떤 수준일지에 대한 응답 결과

- 과세관청이 탈세를 적발했을 때의 처벌 수준을 묻는 질문에 낮은 수준(매우 낮은 수준일 것이다 8.2%, 대체로 낮은 수준일 것이다 37.8%)이거나 적당한 수준(27.9%)일 것이라고 답한 응답자가 73.9%로 조사
 - 낮은 수준일 것이라고 답한 비율은 46%, 적당한 수준일 것이라는 응답비율은 27.9%였으며, 높은 수준(대체로 높은 수준일 것이다 23%, 매우 높은 수준일 것이다 3%)일 것이라는 응답 비율은 26% 수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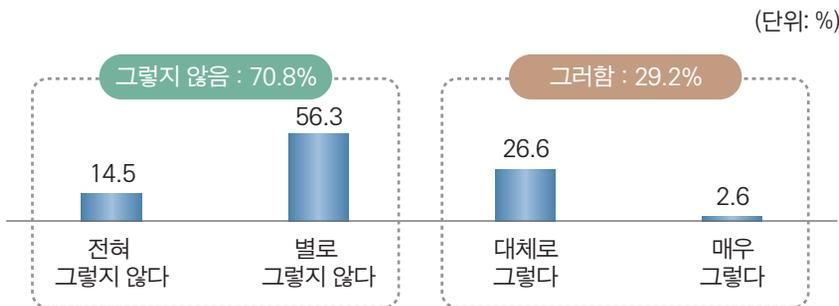
[그림 17] 탈세 적발시 벌금 등 처벌 수준



● ● (불성실 납세자에 대한 과세관청의 대응강도 변화) 과세관청이 과거보다 불성실 납세자에 대해 더욱 엄격하게 대응하고 있는지에 대한 응답 결과

- 응답자 10명 중 7명(70.8%)은 불성실 납세자에 대해 과세관청이 과거보다 더욱 엄격하게 대응하고 있지 않다(전혀 그렇지 않다 14.5%, 별로 그렇지 않다 56.3%)고 응답
 - 과세관청이 엄격하게 대응하고 있다(대체로 그렇다 26.6%, 매우 그렇다 2.6%)는 29.2%로 조사

[그림 18] 불성실 납세자에 대한 과세관청의 대응강도 변화



●● (납세 협력비용에 대한 인식) 연말정산 또는 종합소득세를 신고하는 데 투입되는 시간과 노력의 양에 대한 응답 결과

■ 연말정산이나 종합소득세 신고 등 납세 협력에 대한 시간과 노력의 양을 묻는 질문에 적당하다는 응답비율이 42.7%로 가장 높았으며, 많다(약간 많다 34.3%, 매우 많다 7.1%)는 응답도 41.5%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

- 반면, 납세 협력을 위해 투입되는 시간과 노력의 양이 적다(매우 적다 2.7%, 약간 적다 13%)는 응답비율은 15.7%에 불과

[그림 19] 납세 협력비용에 대한 인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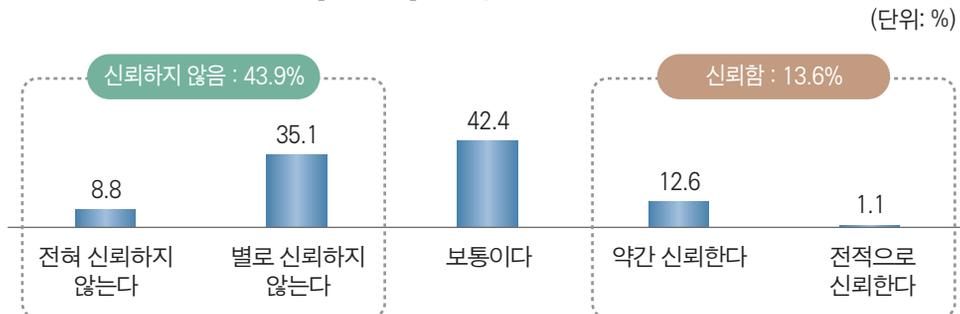


●● (국세청 신뢰) 우리나라 과세관청인 국세청에 대한 신뢰 정도

■ 국세청에 대한 신뢰도를 직접적으로 묻는 질문에 신뢰하지 않는다(전혀 신뢰하지 않는다: 8.8%, 별로 신뢰하지 않는다: 35.1%)는 응답이 43.9%였으며, 중간 입장인 보통이라고 응답한 비율도 42.4%로 조사

- 반면, 국세청을 신뢰한다(약간 신뢰한다: 12.6%, 전적으로 신뢰한다: 1.1%)고 답한 응답자는 13.7%에 불과

[그림 20] 국세청에 대한 신뢰도



다. 납세순응행위 결정요인 분석

- 종속변수인 납세순응행위 변수에 대하여 성실납세의향, 조세이해도, 조세형평성, 사회적 규범, 국세청 신뢰 등의 심리적인 요인들은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양(+)의 효과를 지닌 것으로 조사
 - 동 결과는 국세행정 관련 변수, 인구통계학적 변수(성별, 연령대, 배우자 여부), 수도권 거주 여부, 자영업자 여부, 학력 및 소득수준, 이념적 성향 변수를 통제하고서도 유지
 - 이는 성실납세의향, 조세이해도, 조세형평성, 사회적 규범, 국세청 신뢰 등의 심리적인 요인들이 우리나라 국민들의 납세순응행위에 상당한 영향을 미친다는 점을 확인해 주는 결과

[표 2] 납세순응행위 결정요인에 대한 회귀분석 결과

설명변수		회귀분석 결과		설명변수		회귀분석 결과		
심리적 요인	성실납세의향	0.0167*** (0.0011)		외생 변수	연령	30대	0.1162 (0.1604)	
		사회적 규범	0.0047*** (0.0018)			40대	-0.1076 (0.1753)	
	조세형평성		0.0044** (0.0021)			50대	0.1394 (0.222)	
		조세이해도	0.1954** (0.0867)			60대	-0.238** (0.1074)	
	국세청 신뢰 (신뢰=1)		0.2018** (0.0933)		자영업자 여부 (자영업자=1)		0.2691** (0.1067)	
		제도적 · 행정적 변수	탈세발각 가능성 (높다=1)		0.0158 (0.1117)		지역 (수도권=1)	
처벌 강도	보통		0.0633 (0.1069)		교육수준 (대졸이상=1)		-0.0251 (0.1078)	
			높음	-0.0964 (0.1098)		소득 수준	3천만원 이상 ~ 7천만 미만	-0.0774 (0.0962)
납세 협력 부담	보통			0.0516 (0.1289)			7천만 이상	-0.0521 (0.166)
			높음	0.116 (0.1301)		이념 성향	중립(4~6)	-0.121 (0.1225)
외생 변수	성별 (남성=1)			0.1076 (0.0879)			진보(7~10)	-0.0459 (0.1453)
			배우자 여부 (있음=1)	-0.0593 (0.1494)		Pseudo R ²		0.0776
						분석 모형		순서형 로짓모형

주: () 안은 표준오차를 나타내며, ***, **, *는 각각 1%, 5% 10% 유의수준 아래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함을 뜻함

라. 성실납세성향, 사회적 규범, 조세형평성 변수의 결정요인 분석

- 먼저, 협의의 납세의식이라고 할 수 있는 성실납세의향 변수의 결정요인을 분석한바, 국세청에 대한 신뢰가 높을수록, 정기적인 탈세는 발각 가능성이 높다고 인식할수록 성실납세의향 점수가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높은 것으로 조사
 - 또한 탈세에 대한 처벌강도 인식에서 처벌강도가 높다고 인식하는 사람들은 처벌강도가 낮거나 보통이라고 응답한 사람들보다, 연말정산이나 종합소득세 신고의 납세협력부담이 크다고 인식하는 사람들은 납세협력부담이 작거나 보통이라고 응답한 사람들보다, 남성은 여성보다, 자영업자는 비자영업자에 비해 성실납세의향 점수가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낮게 조사
- 다음, 사회적 규범 변수의 결정요인을 분석한바, 국세청에 대한 신뢰가 높을수록, 정기적인 탈세는 발각 가능성이 높다고 인식할수록 성실납세의향 점수처럼 사회적 규범 점수도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높은 것으로 분석
 - 또한 탈세에 대한 처벌강도 인식에서 처벌강도가 낮다고 인식하는 사람들은 처벌강도가 높거나 보통이라고 응답한 사람들보다, 연말정산이나 종합소득세 신고의 납세협력부담이 낮다고 인식하는 사람들은 납세협력부담이 크거나 보통이라고 응답한 사람들보다, 연령대가 60대인 고령자들은 그렇지 않은 사람들보다, 배우자가 있는 사람들은 없는 사람들보다, 자영업자들은 비자영업자에 비해 사회적 규범 점수가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낮게 분석
- 조세제도의 형평성 변수의 결정요인을 분석한바, 국세청에 대한 신뢰가 높을수록, 정기적인 탈세는 발각 가능성이 높다고 인식할수록 성실납세의향 점수 및 사회적 규범 점수처럼 조세형평도 변수의 점수도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높은 것으로 조사
 - 또한 탈세에 대한 처벌강도 인식에서 처벌강도가 보통이라고 인식하는 사람들은 처벌강도가 높거나 낮다고 응답한 사람들보다, 연말정산이나 종합소득세 신고의 납세협력부담이 보통이라고 인식하는 사람들은 납세협력부담이 크거나 작다고 응답한 사람들보다, 남성이 여성에 비해, 연령대가 높아질수록, 배우자가 없는 사람들인수록 조세형평성 점수가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높은 것으로 분석

[표 3] 성실납세성향, 사회적 규범, 조세형평성 변수의 결정요인 분석

구분		성실납세의향	사회적 규범	조세형평성	
국세청 신뢰 (신뢰=1)		0.5617*** (0.084)	0.4922*** (0.0825)	0.8588*** (0.0829)	
제도적 · 행정적 변수	탈세발각 가능성 (높다=1)	0.5267*** (0.1046)	0.8453*** (0.104)	0.8702*** (0.1024)	
	처벌강도	중간	-0.0803 (0.1001)	0.2702*** (0.0986)	0.3011*** (0.0973)
		높음	-0.2479** (0.1025)	0.2099** (0.0988)	0.0719 (0.0989)
	납세협력 부담	중간	-0.0061 (0.1201)	0.3089*** (0.1172)	0.3355*** (0.1156)
		높음	-0.2495** (0.1205)	0.4031*** (0.1171)	-0.1887 (0.1167)
	외생 변수	성별 (남성=1)		-0.1448* (0.0817)	-0.0535 (0.0805)
연령		30대	-0.041 (0.1415)	-0.0713 (0.138)	0.1529 (0.1361)
		40대	-0.1188 (0.1517)	-0.1885 (0.1475)	0.2522* (0.146)
		50대	0.3409** (0.1637)	-0.2443 (0.1601)	0.307* (0.1586)
		60대	0.4683** (0.2103)	-0.4665** (0.2022)	0.4302** (0.203)
배우자 유무 (있음=1)		-0.152 (0.1003)	-0.1885* (0.0982)	-0.3901*** (0.0967)	
자영업자 여부 (자영업자=1)		-0.3187*** (0.1013)	-0.2612*** (0.0997)	0.0278 (0.0982)	
지역 (수도권=1)		-0.0067 (0.0929)	0.0821 (0.0915)	-0.0075 (0.0904)	
교육수준 (대졸이상=1)		-0.0905 (0.1016)	0.0288 (0.0995)	-0.091 (0.0988)	
소득 수준		3천만이상 ~7천만미만	0.0354 (0.09)	0.0352 (0.0887)	0.0098 (0.087)
		7천만 이상	-0.0303 (0.1579)	0.0107 (0.1572)	-0.1231 (0.1559)
이 념 성 향		중립(4~6)	-0.14 (0.1156)	0.0546 (0.1143)	-0.1841 (0.1132)
		진보(7~10)	-0.3268** (0.1365)	-0.1687 (0.1343)	-0.3948*** (0.1333)
Pseudo R ²		0.0351	0.0327	0.0539	
모형		순서형 로짓모형	순서형 로짓모형	순서형 로짓모형	

주: () 안은 표준오차를 나타내며, ***, **, *는 각각 1%, 5% 10% 유의수준 아래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함을 뜻함

마. 국세청 신뢰 변수의 결정요인 분석

- 일반 국민들의 국세청에 대한 신뢰에 어떤 변수들이 영향을 미치는지 분석
 - 종속변수는 국세청 신뢰에 대한 더미 변수와 국세청에 대한 신뢰 수준이 5단계인 변수로 나눠서 분석
- 종속변수의 유형에 상관없이 국세청에 대한 신뢰는 정기적인 탈세에 대한 발각 가능성이 높다고 인식하는 경우에 통계적으로 매우 유의하게 높은 경향
 - 탈세에 대한 처벌강도 인식에서 처벌강도가 낮다고 인식하는 사람들보다 처벌강도가 보통이거나 높다고 인식한 사람들이, 연말정산이나 종합소득세 신고의 납세협력부담이 보통 수준이라고 인식하는 사람들은 납세협력부담이 작거나 크다고 인식한 사람들보다, 남성보다는 여성이, 배우자가 있는 경우보다는 없는 자가 국세청을 신뢰하는 경향이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더 높은 것으로 분석

[표 4] 외생변수가 국세청 신뢰 변수에 미치는 영향

구분			종속변수: 국세청 신뢰	
			더미 변수	5단계 변수
제도적·행정적 변수	탈세 발각 가능성 (높다=1)		1.0395***	1.1232***
			(0.1295)	(0.1063)
	처벌강도	중간	0.8267***	0.7081***
			(0.1151)	(0.0996)
		높음	0.4982***	0.7002***
			(0.1151)	(0.1035)
	납세협력부담	중간	0.7991***	0.6598***
			(0.1351)	(0.1202)
높음		0.0821	0.1152	
		(0.1356)	(0.121)	
외생 변수	성별 (남성=1)		-0.2995***	-0.2969***
			(0.095)	(0.0824)

구분			종속변수: 국제청 신뢰	
			더미 변수	5단계 변수
외생 변수	배우자 유무 (있음=1)		-0.2913*	-0.2403*
			(0.1628)	(0.1415)
	연령	30대	-0.1348	-0.1325
			(0.1744)	(0.151)
		40대	0.0131	0.0827
			(0.1892)	(0.164)
		50대	-0.0051	0.1807
			(0.2443)	(0.2126)
		60대	0.1176	0.141
			(0.1163)	(0.1008)
	자영업자 여부 (자영업자=1)		0.1457	0.1628
			(0.1178)	(0.1028)
	지역 (수도권=1)		0.0142	0.0068
			(0.1076)	(0.0941)
	교육수준 (대졸이상=1)		-0.1517	-0.127
			(0.1191)	(0.1026)
	소득수준	3천만 이상 ~ 7천만 미만	0.042	0.0852
			(0.105)	(0.0904)
	7천만 이상	-0.1972	-0.1779	
		(0.1783)	(0.1605)	
이념성향	중립(4~6)	0.0114	-0.276**	
		(0.1351)	(0.1184)	
	진보(7~10)	-0.3155**	-0.4983***	
		(0.157)	(0.14)	
상수			-0.3165	
			(0.2313)	
Pseudo R ²			0.1010	0.0694
분석방법			로지모형	순서형로지모형

주: () 안은 표준오차를 나타내며, ***, **, *는 각각 1%, 5% 10% 유의수준 아래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함을 뜻함

Ⅲ 정책제언

- (제언 1) 일반 국민들이 성숙한 납세의식, 즉 성실하게 납세의무를 이행하려는 마음자세와 납세순응이라는 사회적 규범의 형성이 사회 구성원의 납세순응행위에 결정적인 요인임을 고려할 때, 일반 국민들로 하여금 국세청에 대한 신뢰를 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것이 필요
 - 이는 국세청에 대한 신뢰가 높을수록 성실납세의향 및 사회적 규범 점수가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높았기 때문
- (제언 2) 국세청에 대한 신뢰 외에도 정기적으로 탈세를 하는 경우 틀림없이 과세관청에 발각될 것이라는 인식을 심어주는 것도 성실납세의향과 납세순응이라는 사회적 규범의 형성에 도움이 되는 것으로 분석됨에 따라 탈세 발각 가능성을 높이려는 노력이 요구
 - 세무조사나 사후검증 같은 사후적인 법 집행도 중요한 수단이며 사전적으로 탈세를 못하게 만드는 과세망을 구축하는 것도 필요
- (제언 3) 국세청에 대한 일반 국민들의 신뢰를 높이기 위해서는 국민들이 인식하는 탈세적발 가능성을 높이는 방안 및 국민들이 체감하는 처벌강도를 높이는 방안 등이 필요
 - 이는 국세청에 대한 신뢰는 과세행정 관련 변수들에 대한 국민들의 인식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기 때문
 - 특히 일반적으로 정기적인 탈세에 대한 발각 가능성이 높다고 인식하는 경우, 탈세에 대한 처벌강도 인식에서 처벌강도가 보통이거나 높다고 인식하는 경우, 연말정산이나 종합소득세 신고의 납세협력부담이 보통이라고 인식하는 경우에 국세청에 대한 신뢰가 높은 경향
 - 한편 과거의 관행으로 불리며 조세회피 행위가 정당화되는 모습은 국민들로 하여금 탈세에 대한 처벌강도가 약하다는 인식을 심어주고, 국세청에 대한 신뢰에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으므로 지양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
- (제언 4) 국민들에게 세금 부담의 실태에 정보를 더욱 자세하게 알려서 경제적 능력이 높은 사람들이 더 많은 세부담을 지고 있음을 인식시킬 필요가 있는 것으로 분석

- 수직적 형평성과 관련해서 대부분의 국민들이 잘못된 인식을 가진 것은 세부담 현실에 대한 올바른 정보를 제공받는다면 수정될 여지가 있다고 보기 때문
- ● (제언 5) 일상생활의 상거래에서 벌어지는 상황 중 조세회피 또는 탈세와 관련된 상황에 대해 일반 국민들에게 홍보를 강화하여 조세회피 또는 탈세와 관련된 거래에 응하지 않게 할 필요
 - 납세의식 관련 지표 중 성실납세의향 지표보다 납세순응행위 지표가 더 점수가 낮은 이유는 자신의 행동이 조세회피 또는 탈세와 관련이 있음을 인지하지 못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

IV 기대효과

- ● 일반국민들을 대상으로한 설문조사를 분석한 결과, 납세자들의 심리적 요인 변수(성실 납세의향, 사회적 규범, 조세이해도, 조세형평성, 국세청 신뢰 등)는 납세순응행위에 대한 결정요인으로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으로 분석
- ● 납세순응도를 제고하는 것이 최근 재정압박을 받고 있는 세계 모든 국가의 당면과제임을 생각할 때, 일반 국민들로 하여금 기꺼이 성실하게 납세의무를 지려는 태도나 마음가짐을 심어주고, 납세순응이라는 사회적 규범을 확립하며, 국세청에 대한 일반 국민들의 신뢰를 높여 국민들의 자발적인 납세순응행위를 높일 수 있다면 세율 인상 등의 증세조치가 없더라도 현행 세법 아래서도 더 많은 재정을 확보하는 것이 가능

| 참고문헌 |

- 박명호·김봉근·김정권, 「우리나라 국민들의 납세의식 조사」, 한국조세연구원, 2008.
- 박명호, 「우리나라 국민들의 납세의식 추이」, 『재정포럼』, 한국조세연구원, 2011.
- 박명호·전병힐·조명환, 「납세순응행위의 결정요인 분석: 실험적 접근」, 한국조세연구원, 2011.
- 백웅기·박명호 「정부신뢰가 납세순응에 미치는 영향」, 2016 경제학공동학술대회 발표논문, 2016.
- 이해원, 「우리나라 국민들의 납세의식에 관한 설문조사」, 『재정포럼』, 한국조세연구원, 2012.
- Allingham, M. G. and Sandmo, A. “Income tax evasion: a theoretical analysis,” *Journal of Public Economics*, 1, 1972, pp.323-338.
- Birskyte, L., “The Impact of Trust in Government on Tax Paying Behavior of Nonfarm Sole Proprietors,” *Scientific Annals of the “Alexandru Ioan Cuza,” University of Iași Economic Science*, 61(1), 2014, pp. 1-15.
- Jun, B., Cho, M, and Park, M., “Procedural Fairness and Taxpayers’ Response: Evidence from an Experiment,” *Korea Economic Review*, Vol. 31, No. 2, Winter 2015, pp.301-326.
- Kim, C., “Does Fairness Matter in Tax Reporting Behavior?,” *Journal of Economic Psychology*, Vol. 23, No. 4, 2002, pp.771-785.
- OECD, “Understanding and Influencing Taxpayers’ Compliance Behaviour,” 2010.
- OECD, “What Drives Tax Morale?,” 2013.
- Spicer, M.W. and L.A. Becker, “Fiscal inequity and tax evasion: an experimental approach,” *National Tax Journal*, Vol. 33, 1980, pp.171-175.
- Scholz, J., “Trust, Taxes, and Compliance,” in *Trust and Governance*, (eds). Braithwaite, V. and M. Levi, Russel Sage Foundation Publication, 2003, pp.135-166.
- Torgler, B., “Tax Morale and Compliance: Review of Evidence and Case Studies for Europe,” World Bank Policy Research Working Paper, 5922, 2011.
- Torgler, B. and F. Schneider, “The Impact of Tax Morale and Institutional Quality on the Shadow Economy,” IZA DP No. 2541, 2007.
- Wenzel, M., “An Analysis of Norm Processes in Tax Compliance,” *Journal of Economic Psychology*, Vol. 25, No. 2, 2004, pp.213-228.
- Yitzhaki, S., “Income Tax Evasion: A Note,” *Journal of Public Economics*, Vol. 3, 1974, pp.201-202.



BRIEF

납세자의 심리적 요인이 납세순응행위에 미치는 영향

2016. 5. 12(통권 제28호)

- 발행인 : 박형수
 - 발행처 : 한국조세재정연구원
 - 주 소 : 30147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1924
 - 전 화 : 044-414-2503
 - 팩 스 : 044-414-2509
 - 인쇄처 : (주)참기획
-